

충북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수용성 연구

이소영
충북연구원

e-mail:sylee@cri.re.kr

A Study on the Public Acceptance of the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SoYoung LEE
Chungbuk Research Institute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사회갈등의 해소와 보급·확대를 위한 주민 및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과 주변 지역주민의 수용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민 보상, 지원 및 이익 공유와 같은 경제적 수단 및 인센티브 관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충북형 주민친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구축의 방향을 제시한다.

만, 구체적 가이드 라인과 이익 공유 혜택의 공정성 부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북도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산과 발전 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정부의 인허가와 별도로 사업자와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발전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민 보상과 지원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거나 법적 구속력이 약하여 주로 사업자가 주민과 직접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어렵게 하는 커다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추진 및 이에 대응하는 신재생에너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민 대상 보상 및 이익 공유 방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1. 서론

2020년 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계획하고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ADS)을 수립·확정하여 UN에 제출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원활하게 보급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입지선정과 개발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정부 및 발전사업자 간의 갈등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사업 진행을 지남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국, 유럽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진사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보급하는 과정 가운데 주민들의 수용성이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될 수 있기에,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및 이익공유체계 (Benefit-Sharing Mechanisms) 개념을 정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사업에 널리 적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보상 및 지원,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지

2.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 및 쟁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에너지 계획과 RPS, FIT, 용자 및 세액보조 등의 보급 확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여전히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현황은 저조하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같은 국제 정세 변화와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걸림돌 발생이 우려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새 에너지 정책으로 실현가능성, 주민수용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제 설정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

3.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수용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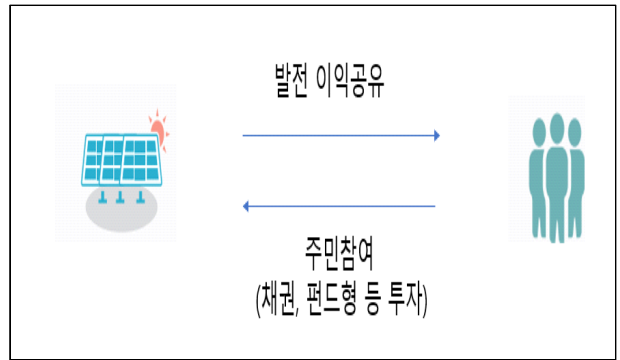
지방분권기능이 강화되고 지자체 주민의식이 성장해오는 과정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여러 곳에 배치되면서 지역 사회와의 충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여러 유형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소음, 건강 문제 우려 등의 국소적 외부성부터 신재생에너지가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이라는 일반적인 주장과 같이 단점으로 강하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있어 수용성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결과로 낮은 수용 수준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의 개발을 심각하게 좌절시킬 수 있으므로, 저항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수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내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주민이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사업 및 정부 관계자, 지역주민과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며,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도입, 운영, 관리 과정에서 수용성의 문제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분쟁 및 갈등해결 사례를 제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충북 신재생에너지 주민 상생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 폐자원·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주민 수익모델을 창출하여 님비현상 극복하고 주민들이 기피하고, 혐오한 시설에 에너지 자립, 문화관광 등 주민 수익모델을 더하여, 주민의 소득을 창출 및 향상을 통해 환경시설의 자발적 설치 유인할수 있는 충북형 주민친화 신재생에너지파크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충북지역 자연환경과 최신 트렌드를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신재생 발전시설은 체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특화사업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확장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충청북도에서도 갈등해결과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하였다.



[그림 1] 충북형 주민친화 신재생에너지파크 수익모델 예시

참고문헌

- [1] 이경민·윤순진. “재생가능에너지사업 이익공유체계 도입의 긍정적효과와 문제 상황: 제주도 육상풍력발전 주변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 65호, 227-270.,2018.
- [2] 이상훈, 윤성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 환경법과 정책, 15, 133-166. 2015.